

정부 2007 세제개편안 살펴보니

소득세 얼마나 줄까

연봉 4,000만원 4인가족 18만원 줄어

재정경제부는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경감해준다고 밝혔다.

기준에 과표 1천만원 이하까지는 세율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분에 35%를 각각 부과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1천200만원까지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조정된다.

큰 구간으로 분류해 소득세 경감액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1천500만원~4천만원인 경우 연간 18만원, 5천만원부터 8천만원인 72만원, 9천만원 이상은 144만원이 된다. 이번에 조정이 되는 구간에 과표가 있는 경우는 그 크기에 따라 경감액이 조금씩 달라진다.

과세표준은 근로자의 실제 급여나 자영업자의 실소득과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의 과표는 실제 소득보다 적게 잡아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을 빼야하고 자영업자도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제외해야 과표가 산정된다.

재정경제부가 각종 공제를 감안해서 근로자들의 실제 세부담 감소를 추산한 결과 연간급

여 4천만원인 4인가족(근로자 1명, 비근로자인 배우자, 자녀 2명)의 경우 소득세는 현행 132만원에서 114만원으로 18만원(13.6%)이 줄어든다.

연봉 5천만원인 4인 가족도 279만원에서 261만원으로 18만원(6.4%), 7천만원인 3인 가족(근로자, 비근로자인 배우자, 자녀 1명)은 648만원에서 593만원으로 55만원(8.5%)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연봉 1억원에 4인가족이라면 1천311만원에서 1천239만원으로 72만원(5.5%)이 줄어든다.

연간급여 2천만원의 근로자는 과표가 1천2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수에 관계없이 세금이 그대로이고 연봉 3천만원의

연봉(과세표준)	현행	개정안	감소액	감소율
1인가족	3,000만원	302만원	269만원	89.7%
2인가족	4,000만원	233만원	367만원	91.7%
3인가족	5,000만원	283만원	417만원	83.4%
4인가족	6,000만원	309만원	591만원	98.5%
5인가족	7,000만원	359만원	641만원	91.6%
6인가족	8,000만원	409만원	791만원	97.6%
7인가족	9,000만원	459만원	941만원	104.2%

독신자 가구는 92만원에서 74만원으로 18만원(19.2%)이, 같은 연봉에 2인가족(근로자, 비근로자인 배우자)는 75만원에서 62만원으로 13만원(16.8%)이 줄어든다.

재정부는 이번 과표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세수가 1조1천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또 이번 개편안에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를 신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한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소득세에서 추가공제 해주기로 했다.

구분	목적 효과	세부 내용
과표조정	종합소득세 과표 상향, 소득세 부담 완화	△1200만원 이하 8% △1200만~4600만원 17% △4600만~8800만원 26% △8800만원 초과 35%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확대	△3년 10% △4년 12% △5년 15% △11년 33% △12년 36% △15년 이상 45%
	해외부동산 양도세 부담 완화	△보유 2년 이상 9~36% △1~2년 40% △1년 미만 50%~9~36%로 단일화
	R&D활성화	당기분 공제 도입, R&D지출액 3%기본공제,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율 0.5% 추가 공제 (3%한도)
대기업	해외자권개발 활성화	투자액 3%공제, 해외 지분 투자 포함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	북한 개성공단 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금7%공제) 대상에 포함
중소기업	기업상속 공제 확대	공제액 1억원~2억원 또는 상속재산 20%(최대 30억원), 기업 주식도 사전상속
서민·자영업자	출산·입양 장려	자녀 출산·입양시 1인당 200만원 소득공제 추가
	성실 자영업자 육성	성실 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허용
	농어촌 난민비 인하	농어촌 특소세 134원~90원 인하
	소액 현금영수증 장려	5000원 이하 현금영수증 발급
일반생활	납세 편의 도모	소득세, 부가(가)세, 증부세 등 국제 신용카드로 납부, 1% 내외 수수료 납세자 부담
	기부금 활성화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10%) 2008년 15%, 2010년 20%로 확대, 종교 단체 적용 예외
	과세 합리화	연예인 전속 계약금 분할 과세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비과세·감면제 10개 폐지, 4개 축소, 8개 연장

경차기준 배기량 1,000cc로 상향

특소세 30년만에 개별소비세로 명칭 변경

특소세가 개소세로 이름을 바꾸면서 승용 자동차 가운데 이 세금을 부과하지않는 경차의 배기량 및 크기 상한이 내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배기량은 현행 800cc에서 1천cc로, 길이와 폭은 각각 3.5m, 1.5m에서 각각 3.6m, 1.6m로 높아져 현재 유일한 경차인 GM대우의 '마티즈' 외에 기아자동차의 '모닝'도 경차로 인정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배기량에 따른 특소세 부과가 미국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배기량 2천cc 이상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하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경마·경륜 외에 또다른 사행성 스포츠인 경정 입장에도 회당 200원씩 부과된다.

성실자영업자도 의료·교육비 공제

이번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 부터 성실 자영업자도 연말 소득공제 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허용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자영업자에도 허용해 소득공제의 형평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성실 자영업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2009년까지 2년간 시행한 뒤 성과를 평가해 공제대상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성실 자영업자의 요건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복합

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 실제 사용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최근 3년간 조세법으로 처벌받거나 세금 체납한 사실 없을 것 등으로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한 규모가 전체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와 과다계상한 경비가 전체 경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분을 추징하고 3년동안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근로자 평균인 730여만원으로 가정하고 4인 가족(자녀 2명), 소득 3천만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세부담은 현행 328만4천원에서 203만6천원으로 124만8천원(38.0%)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최근 수년동안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이 크게 높아졌고 일부 성실사업자의 과표는 거의 노출된 점을 감안할 때 성실사업자에 대해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업상속때 최대 30억까지 공제

상속·증여세 완화

정부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상속 공제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 또는 기업상속 재산가액의 20%(30억원한도) 중 큰 금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를 장기간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개선해 세금납부의 거처기간을 신장하는 등 자금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우선 기업상속이 아닌 일반적 인 경우의 연부연납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기업

상속의 경우에는 ▲기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50% 이상일 때 3년거치후 최대 12년간 분납 ▲기타의 경우 2년거치후 최대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 기존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형편을 감안해 연부연납 기간을 결정하던 것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말로 끝나는 '사전상속 특별제도'를 2010년말까지 3년 연장하고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로 대상을 확대했다.

